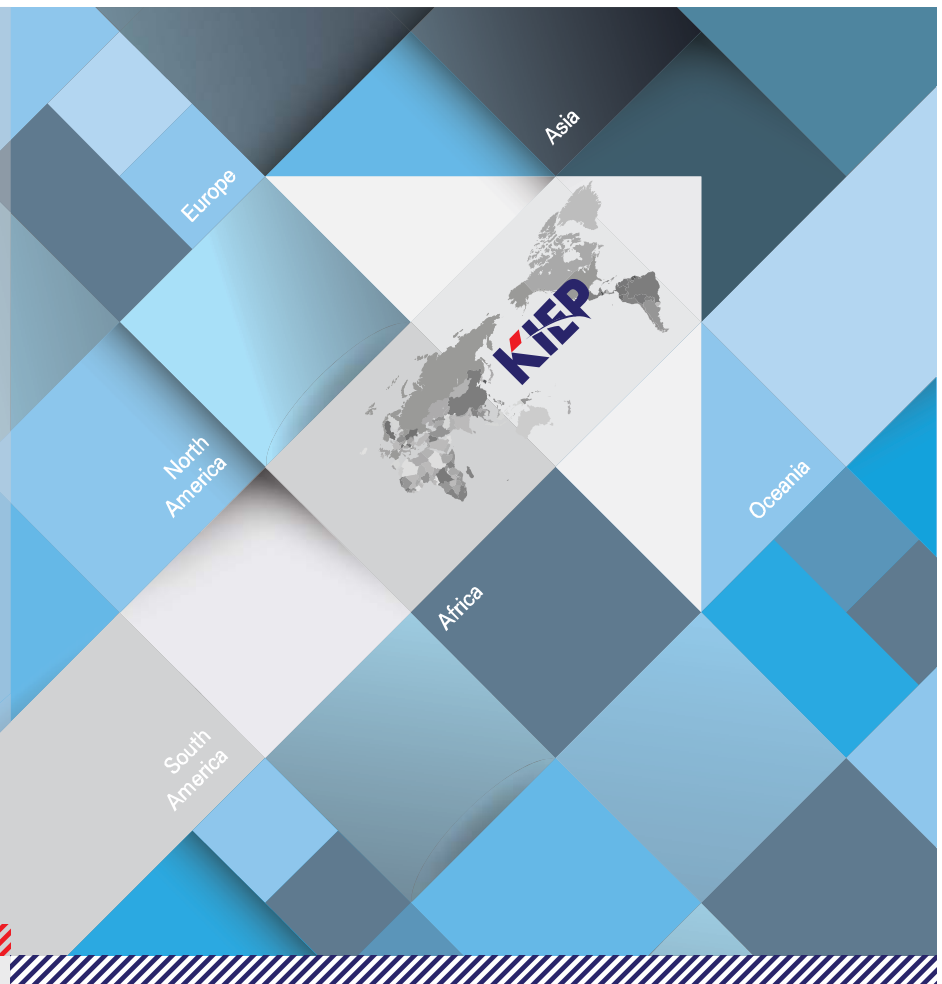




#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강민지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mjkang@kiep.go.kr, 044-414-1196)

##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 요약

#### ▶ [배경]

- 최근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함. 분야별로는 철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중국의 WTO 가입 15년 후 비시장경제(NME) 분류에 따른 반덤핑조사 방식 적용이 종료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중국산 수입증에 따른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자국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제를 개정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중국 견제에 나서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바 미국 및 EU의 무역구제조치의 개정 내용 및 적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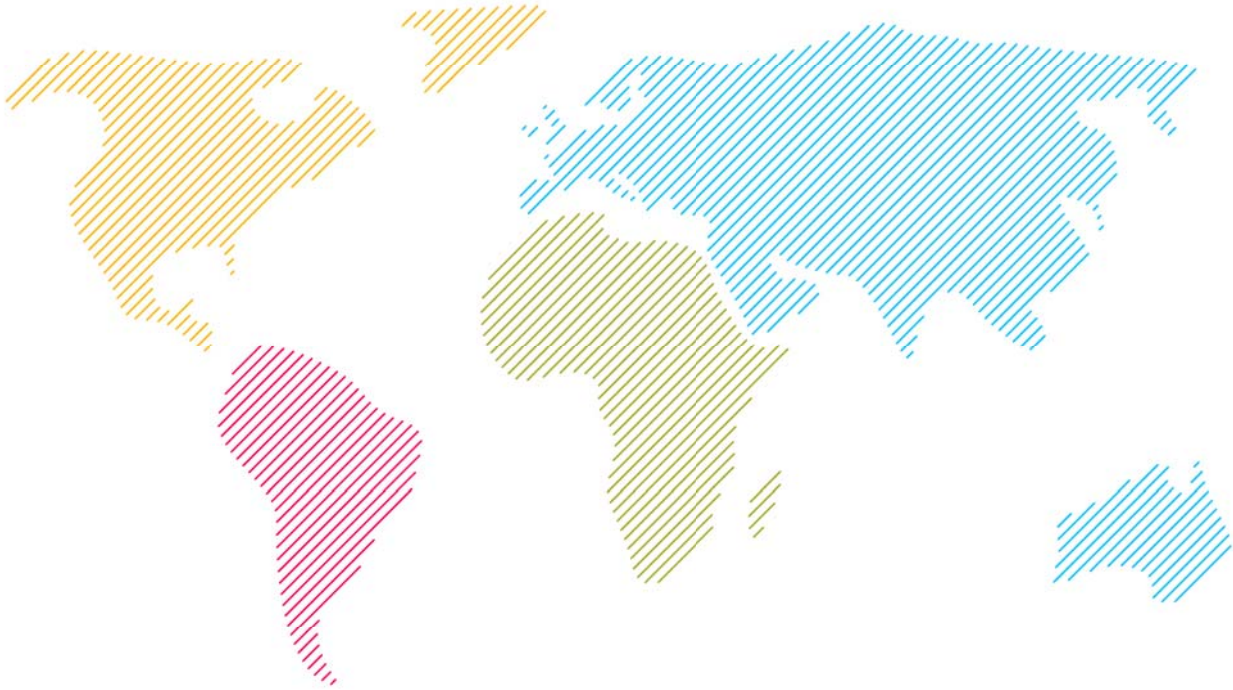
- 2015년 6월 서명된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이 개정되어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산업피해 판단,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에서의 조사당국의 재량권 강화가 이루어짐.
- 외국수출기업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더 용이하게 AFA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무부가 수출국의 시장가격 또는 비용이 PMS를 이유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 시 정상가격을 계산하는데 대체 시장경제국의 비용을 활용한 구성가격 방식 등을 사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이 부과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에도 AFA와 PMS를 활용하여 고율의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바 현재 미국의 AFA 관행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한 상황임.

#### ▶ [EU]

- EU는 2017년 12월 20일 반덤핑규칙(2017/2321)을 발효하여 기존 반덤핑규칙을 일부 개정함.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중대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EU 집행위는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러시아 및 다른 국가/산업의 중대한 왜곡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EU 업계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소제기 및 재심 청구가 가능함.

#### ▶ [결론]

- 재량권 강화에 따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자의적으로 취해질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는 미국의 반덤핑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EU의 '중대한 왜곡'에 대한 기준 적용이 시장경제국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직권 조사로 인한 조사 개시 증가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 조사에 주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차 례

### 1. 서언

### 2.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 개정 및 적용

- 가. 관련 배경
- 나. 불리한 가용정보(AFA)
- 다. 특별한 시장상황(PMS)
- 라. 평가

### 3. EU의 무역구제 관련 법 개정 및 적용

- 가. 관련 배경
- 나. 주요 개정 내용
- 다. 시장왜곡 보고서
- 라. 평가

### 4. 결어

### 참고문헌

### 부록

## 1. 서언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덤핑조치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

표 1. 무역구제조치의 활용(조사 개시 기준)

|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1~6월 |
|-------|------|------|------|------|------|------|------|------|------|-----------|
| 반덤핑   | 218  | 217  | 173  | 165  | 208  | 287  | 236  | 229  | 298  | 139       |
| 상계관세  | 16   | 28   | 9    | 25   | 23   | 33   | 45   | 31   | 34   | 22        |
| 세이프가드 | 10   | 25   | 20   | 12   | 24   | 18   | 23   | 17   | 11   | 5         |
| 전체    | 244  | 270  | 202  | 202  | 255  | 338  | 304  | 277  | 343  | 166       |

자료: WT/TPR/OV/2011 Chart 3.3(반덤핑), p. 30; Chart 3.5(상계관세), p. 35; Chart 3.8(세이프가드), p. 39 자료를 토대로 도표 작성, 전체 조치 합산.

- 무역구제조치로는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가 있는데 상계관세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세이프가드의 경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요구되어 이 중 반덤핑제도가 가장 활용도(전체 무역구제조치 중 약 80% 정도)가 높음.

표 2. 무역구제조치의 구분 및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특징                                         |
|--------------------------------------|--------------------------------------------------------------------------------------------------------------------------------------------------------------------------------------------------------------------------------------------------------|--------------------------------------------|
| 반덤핑조치<br>(Anti-Dumping Measures)     |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수입 당국이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dumping margin)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 높은 활용도/<br>선진국뿐 아니라<br>개도국에서도 활용이 많음.      |
| 상계관세 조치<br>(Countervailing Measures) |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의 수출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 주로 선진국이 활용/<br>수출국정부에 대해 보조금<br>지급여부 조사 필요 |
| 긴급수입제한조치<br>(Safeguard)              |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 수출국의 공정무역에<br>대한 무역구제조치/<br>심각한 피해 요구      |

1) WTO,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16 November 2017),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trdev\\_04dec17\\_e.pdf](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trdev_04dec17_e.pdf)(검색일: 2018. 2. 22).

- 최근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인도, 미국에서의 반덤핑조사 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반덤핑조치 부과에 있어서 인도, 미국, 브라질 등의 국가가 조치를 많이 부과하며 특히 미국은 최근(2016년 7월~2017년 6월) 사이에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함.

표 3. 보고국별 반덤핑조사 개시/ 조치 부과 현황

| 조사 개시          |                   |                   |                   |                           | 조치 부과          |                   |                   |                   |                           |
|----------------|-------------------|-------------------|-------------------|---------------------------|----------------|-------------------|-------------------|-------------------|---------------------------|
| 조사국<br>(수입국)   | '14.7월~<br>'15.6월 | '15.7월~<br>'16.6월 | '16.7월~<br>'17.6월 | 계<br>( '14.7월~<br>'17.6월) | 조사국<br>(수입국)   | '14.7월~<br>'15.6월 | '15.7월~<br>'16.6월 | '16.7월~<br>'17.6월 | 계<br>( '14.7월~<br>'17.6월) |
| 1. 인도          | 37                | 66                | 55                | 158                       | 1. 인도          | 32                | 38                | 41                | 111                       |
| 2. 미국          | 21                | 51                | 47                | 119                       | 2. 미국          | 23                | 19                | 49                | 91                        |
| 3. 호주          | 14                | 18                | 18                | 50                        | 3. 브라질         | 50                | 9                 | 14                | 73                        |
| 4. 터키          | 22                | 8                 | 19                | 49                        | 4. 호주          | 16                | 8                 | 11                | 35                        |
| 5. 브라질         | 18                | 15                | 12                | 45                        | 5. 멕시코         | 6                 | 14                | 7                 | 27                        |
| 6. EU          | 15                | 12                | 12                | 39                        | 6. 캐나다         | 12                | 2                 | 12                | 26                        |
| 7. 파키스탄        | 3                 | 22                | 13                | 38                        | 7. 터키          | 8                 | 8                 | 7                 | 23                        |
| 8. 아르헨티나       | 6                 | 8                 | 21                | 35                        | 8. EU          | 1                 | 10                | 11                | 22                        |
| 9. 캐나다         | 12                | 4                 | 19                | 35                        | 9. 아르헨티나       | 14                | 4                 | 2                 | 20                        |
| 10. 중국         | 6                 | 10                | 12                | 28                        | 10. 중국         | 2                 | 8                 | 10                | 20                        |
| 총합<br>(기타국 포함) | 238               | 268               | 290               |                           | 총합<br>(기타국 포함) | 198               | 151               | 208               |                           |

자료: WT/TPR/OV/20<sup>2)</sup> Table 3.4(조사 개시), pp. 29~30 및 Table 3.5(조치 부과), p. 31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저자 기간별 수치 합산 및 순위 산정.

- 반덤핑조사 품목별 분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생산과잉을 보이고 있는 철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학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4. 품목별 반덤핑조사개시 현황

|    | 1기('14. 7월~'15. 6월) | 2기('15. 7월~'16. 6월) | 3기('16. 7월~'17. 6월) |
|----|---------------------|---------------------|---------------------|
| 1위 | 철강(36%)             | 철강(37%)             | 철강(41%)             |
| 2위 | 화학제품(24%)           | 기타(20%)             | 화학제품(27%)           |
| 3위 | 기타(17%)             | 화학제품(13%)           | 플라스틱(11%)           |
| 4위 | 플라스틱(16%)           | 섬유류(7%)             | 기타(10%)             |
| 5위 | 기계(4%)              | 플라스틱(7%)            | 섬유 및 의류(7%)         |
| 6위 | 종이(4%)              | 종이(5%)              | 유리/세라믹(4%)          |

자료: WT/TPR/OV/20<sup>3)</sup> Chart 3.4, p. 33.

2) Ibid.

3) Ibid.

-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 회복 둔화와 더불어, 각국 내 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불만과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반무역정서, 자국우선주의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가장 많은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표 5. 국가별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현황(2018년 3월 5일 기준)

|          | 철강/금속  | 화학제품   | 섬유류   | 전기전자  | 기타    | 총계      |
|----------|--------|--------|-------|-------|-------|---------|
| 미국       | 28(4)  | 3(1)   | 3(2)  | 5     | 1(1)  | 40(8)   |
| 인도       | 7      | 17(1)  | 3     |       | 2(1)  | 29(2)   |
| 터키       | 1      | 7(3)   | 4     |       | 3     | 15(3)   |
| 중국       | 1      | 10(3)  | 1     | 1     | 1     | 14(3)   |
| 브라질      | 3      | 3(1)   | 2     | 1     | 2     | 11(1)   |
| 캐나다      | 9      |        |       | 1     |       | 10      |
| 태국       | 9(1)   |        |       |       |       | 9(1)    |
| 호주       | 7(2)   |        |       |       | 1     | 8(2)    |
| 말레이시아    | 6      | 1      |       |       |       | 7       |
| 인도네시아    | 4      | 2      |       |       | 1     | 7       |
| EU       | 3      | 1      |       |       | 1     | 5       |
| 베트남      | 3      | 2(1)   |       |       |       | 5(1)    |
| 기타       | 12(6)  | 11(5)  | 1     | 2     | 10(3) | 36(14)  |
| 총계(27개국) | 93(13) | 57(15) | 14(2) | 10(0) | 22(5) | 196(35) |

주: 1) ( ) 안의 표시 부분은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2) 상기 수치는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對韓수입규제 월간 동향(2018년 3월 5일 기준).<sup>4)</sup>

- 한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가입 15년 후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NME) 분류에 따른 반덤핑조사 방식 적용을 종료하여야 할 가능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중국산의 수입증가로 인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자국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제를 개정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음.

#### 비시장경제국(NME)

- 한 국가의 원자재,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되어 시장경제국 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를 말함.
- 수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시, 제소국은 수출국 내 시장가격 혹은 생산비용과 수출가격 차이로 덤핑마진을 측정하게 되는데 비시장경제국 제품의 덤핑조사 시 수출국 내 시장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간주하여 제3국 가격 기준을 활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덤핑마진(정상가격-수출가격)이 더 높게 계산되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짐.

4)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對韓수입규제 월간 동향, [http://www.ntb-portal.or.kr/import/condition\\_months\\_view.screen?menuid=ntb040301](http://www.ntb-portal.or.kr/import/condition_months_view.screen?menuid=ntb040301)(검색일: 2018. 3. 15).

-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15년간 무역상대국들이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sup>5)</sup> 2016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시장경제국(market economy) 지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을 보임.<sup>6)</sup>

\* 우리나라는 기간 도래 전 2005년에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함.

- 중국은 2016년 12월 11일 이후 WTO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과 EU 등은 중국이 강력한 중국정부의 통제 하에 작동되고 있어 아직까지 비시장경제로 보아야 하며,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할 경우 반덤핑관세 활용에 제약이 생겨 중국산 수입증가로 자국의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 산업이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함.
- 중국은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5조 제2항 (a)(ii) 만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정상가격 산정 시 우선적으로 수출국내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등의 위반이 있다며 EU 및 미국을 2016년 12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함.<sup>7)</sup>
- 미국과 EU는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관련 규정의 종료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은 2015년 무역구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특별한 시장상황 개정 등 조사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EU는 기존의 시장경제국/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을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개념('중대한 왜곡')을 도입하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관련 규정의 만료에 따른 주요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 개정 및 적용 하에서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바 미국 및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 내용 및 적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 중 중국 다음 2위로,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품목인 철강, 화학제품 등이 주력산업이므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따라 각국의 무역구제조치가 확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수출환경은 악화될 수 있음.
-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만료에 따라 시장경제국/비시장경제국의 구분이 아니라 '특별한 시장상황', '중대한 왜곡' 등 종전과는 다른 기법으로 무역구제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산 원자재 이용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및 EU의 무역구제조치 개정 내용을 살펴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5)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제2항 (a)(ii)는 "반덤핑조사를 받는 생산자가 제조, 생산, 판매에서 동종상품 생산 산업에 시장경제조건이 쓰이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국은 중국의 국내 가격 또는 원가와외의 엄격한 비교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하여 WTO의 회원국들은 2001년부터 15년 동안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시 '대체국(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었음.

6)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제2항 (d)는 "...어떠한 경우에도(in any event) (a)(ii)는 가입일로부터 15년 후에는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기간 만료로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강력한 중국정부의 통제하에 작동되고 있어 아직까지 비시장경제로 보아야 하며, 가입의정서 제15조 제2항 (a)(ii)가 만료되더라도 "중국 생산자가 시장경제조건을 명확히 입증할 경우 반덤핑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한다"는 제15항 (a)(i)는 남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또한 제15항 (d)에서 중국 측이 시장경제조건을 입증할 때 수입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논의는 한국무역협회(2016), pp. 1~8 참고.

7) EU 조치와 관련하여 2017년 7월 10일 패널이 구성되었으나 2017년 12월 8일 패널의장이 패널의 업무가 사무국의 활용가능한 법학자의 부족으로 인해 연기될 것이라고 공지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 전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봄.

EU 관련 제소(DS51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6_e.htm)(검색일: 2018. 2. 28).

미국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협의 중임.

미국 관련 제소(DS51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5\\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5_e.htm)(검색일: 2018. 2. 28).

## 2.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 개정 및 적용

### 가. 관련 배경

■ [배경]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지지 기반의 중심으로 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로 통상팀을 구성하여 미국 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 중국을 상대로 한 철강 분야 반덤핑 제소에서 미국 철강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로 임명하였으며, 중국산 철강 제품 덤핑에 대해 비판해오던 윌버 로스(Wilbur Ross)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장관에 임명하는 등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로 통상팀을 구성하여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표방함.
- 미국은 2018년 통상정책의제(THE PRESIDENT'S TRADE POLICY AGENDA)<sup>8)</sup> 보고서 중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 협정 추진(Negotiating Trade Deals that Work for All Americans)'에서 무역 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북미자유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등 주요 무역협정 개정협상 추진을 언급함.
- 또한 2018년 통상정책의제 보고서 '미국 통상법 집행과 보호(Enforcing and Defending U.S. Trade Laws)'에서 모든 사용 가능한 통상법을 활용해 수입을 규제하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무역제제조치를 통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음.

표 6. 미 대통령이 사용 가능한 무역제제조치 및 최근 이슈

| 구분                        | 발동 조건                                 | 가능한 조치                                                       | 최근 이슈                                                          |
|---------------------------|---------------------------------------|--------------------------------------------------------------|----------------------------------------------------------------|
| 통상법 232조<br>(1962년 무역확장법) |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              | 관세 부과, 쿼터                                                    |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
| 통상법 201조<br>(1974년 통상법)   |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세이프가드                | 최대 150일 동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에 대해 15%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 세탁기/태양광 패널 관세부과, WTO DSB 제소 검토                                 |
| 일반 301조<br>(1974년 통상법)    | 무역협정 권리 보호 및 미국 수출에 대한 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 | 위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무역협정 내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양허 등을 유예 등 보복조치 | 2017년 8월 14일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강제적 기술이전요구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 내용 대통령 각서 서명 |
| 슈퍼 301조<br>(1988년 종합무역법)  | 교역대상국의 무역장벽 및 불공정 무역행위 해소             | 일방적인 보복조치 <sup>9)</sup> 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책임.              | -----<br>3월 말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간 예정                           |
|                           | *제301조 발동권한 USTR로 이전, 보복조치 발동 강화.     |                                                              |                                                                |

8)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and 2017 Annual Repor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ports/2018/AR/2018%20Annual%20Report%20I.pdf>(검색일: 2018. 3. 12).

| 구분                        | 발동 조건                                           | 가능한 조치                                                                               | 최근 이슈                                                |
|---------------------------|-------------------------------------------------|--------------------------------------------------------------------------------------|------------------------------------------------------|
| 스페셜 301조<br>(1988년 종합무역법) |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초점                                |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또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한 뒤 제재를 가함. <sup>10)</sup> | 4월 말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예정 - 美 최대 제약협회가 2018년 한국을 PWL로 요청 |
| 교역촉진법<br>(2015)           | 대미 무역수지(\$200억), 경상수지(GDP의 3%), 외환시장개입(GDP의 2%) |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 4월 중순 미국재무부 환율보고서 발간 예정                              |

- 또한 2018년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상계관세에서도 2017년 연간 조사 개시 건수는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84건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더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함.
- USITC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현황 관련 통계<sup>11)</sup>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 현재 미국은 총 431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조치가 159건으로 가장 많으며 인도(36건), 한국(30건), 대만(24건) 순으로 이어짐.

표 7. 미국의 국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현황(2018년 3월 12일 기준)

(단위: 건수)

|      | 중국  | 인도 | 한국 | 대만 | 일본 | 터키 | 브라질 | 인도네시아 | 멕시코 | 베트남 | 총계<br>(기타국 포함) |
|------|-----|----|----|----|----|----|-----|-------|-----|-----|----------------|
| 반덤핑  | 112 | 20 | 23 | 23 | 19 | 9  | 12  | 9     | 13  | 9   | 327            |
| 상계관세 | 47  | 16 | 7  | 1  |    | 7  | 4   | 5     | 1   | 3   | 104            |
| 총계   | 159 | 36 | 30 | 24 | 19 | 16 | 16  | 14    | 14  | 12  | 431            |

자료: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IN PLACE.<sup>12)</sup>

- 미국의 무역구제조사 및 조치 증가는 관련 법 개정 및 美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TPEA] 2015년 6월 서명된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TPEA)<sup>13)</sup>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이 개정되어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산업피해 판단,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에서의 조사당국의 재량권 강화가 이루어짐.
- 무역특혜연장법에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안, 일반특혜관세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제5부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9)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함. 이 조치의 수정과 철회는 언제든 가능하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4년 후에 유효 기간이 소멸됨.

10) 한국은 2005~08년 Watch List (WL)였으나 2009년 이후 대상이 아님.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 2013, 2016, 2017년에는 한국을 WL로 2014년과 2015년에는 PWL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11)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IN PLACE,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 (검색일: 2018. 3. 19).

12) Ibid.

13)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27/PLAW-114publ27.pdf>(검색일: 2018. 3. 2).

표 8. 무역특혜연장법(TPEA)의 구성

| 구분  | 제목                                                                              |
|-----|---------------------------------------------------------------------------------|
| 제1부 | EXTENSION OF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br>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안 연장            |
| 제2부 | EXTENSION OF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br>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              |
| 제3부 | EXTENSION OF PREFERENTIAL DUTY TREATMENT PROGRAM FOR HAITI<br>아이티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연장 |
| 제4부 | EXTEN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br>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                    |
| 제5부 | IMPROVEMENTS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br>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의 개선    |
| 제6부 | TARIFF CLASSIFICATION OF CERTAIN ARTICLES<br>관세 분류                              |
| 제7부 | MISCELLANEOUS PROVISIONS<br>부칙                                                  |
| 제8부 | OFFSETS<br>상제                                                                   |

- TPEA 제5부(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의 개선)는 철강산업을 지지하는 셰리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오하이오주)<sup>14)</sup>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무역집행효과법(안)(American Trade Enforcement and Effectiveness Act)<sup>15)</sup>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운영 및 집행 관련 1930년 관세법을 수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제5부에서는 대상 기업의 비협조시 상무부의 AFA 적용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 정의를 개정하고 PMS인 경우 정상가격 산정 시 수출국 국내가격/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재량이 강화됨.

표 9. TPEA 제5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501조 | Short title(약칭)                                                                                                  | 약칭: 미국무역집행효과법                                                                                                                                                                          |
| 제502조 | Consequences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절차에서 정보 제출에 협력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 | 조사당국의 AFA 적용 권한 대폭 강화<br>⇒ 외국수출기업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더 용이하게 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 산정 가능                                                                                                     |
| 제503조 | Definition of 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정의)                                                                       | 무역위원회의 실질적 피해 입증 부담 경감<br>(실질적 피해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는 해당 산업이 수익률이 있거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피해 부정판결을 내릴 수 없음. 고려해야 하는 추가요인: 총이익과 순이익, 채무변제능력, 자산수익률 등)<br>⇒ 이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짐. |

14) 오하이오주는 철강회사 AK 철강 본사가 있으며 예로부터 철강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함.

15) H.R. 2523 — 114th Congress: 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4/hr2523>.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504조 | Particular market situation<br>(특별한 시장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가격을 부인하는 재량권 강화</li> <li>- 상무부가 수출국의 시장가격 또는 비용이 PMS를 이유로 왜곡되어있다고 판단 시 정상가격(Normal value)을 계산하는 데 제3국의 가격과 비용을 사용</li> </ul> ⇒ 수출국의 시장가격 또는 비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 산정 가능                                                                 |
| 제505조 | Distortion of prices or costs<br>(가격 또는 비용의 왜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 미만의 판매 증거가 없이도 조사대상 기업에게 생산비 자료를 제출 요청 가능</li> <li>-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대체 평가 허용</li> </ul>                                                                                                                                                  |
| 제506조 | Reduction in burden on Department of Commerce by reducing the number of voluntary respondents.<br>(자발적 답변자의 수 축소를 통한 상무부의 부담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가 “지나치게 부담(unduly burdensome)”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연례재심에서 자발적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 강화</li> </ul> ⇒ 최근 개별산정을 신청하는 피조사기업이 증가하고 신청 기각 시 불복하여 제소하는 경우 많아지자, 사건의 복잡성, 유사한 사건의 처리 경험, 수행 중인 사건 총 수, 기타 조사의 신속한 수행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산정신청 수용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 제507조 | Application to Canada and Mexico<br>(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적용)                                                                           | NAFTA 회원국 관련 TPEA 내용이 적용됨을 명시 <sup>16)</sup>                                                                                                                                                                                                                                              |

- 이 중 특히 제502조의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제504조 특별한 시장상황(PMS)의 적용과 관련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함.

## 나. 불리한 가용정보(AFA)

■ [AFA]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이하,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①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거부 ②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 거부 ③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한 경우에 이용가능 정보를 적용할 수 있음.

-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19 U.S. Code §1677e)도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제출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당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 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음.
- 그러나 개정 전 미연방순회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은 AFA 덤핑마진율/상계관세율이 비합리적으로 높아서는 안 된다고 미 상무부(USDOC)의 재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왔음.
- 이 법원은 Gallant Ocean (Thai.) 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상무부의 AFA 마진율/상계관세율은 피조사인의 실제 마진율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산(reasonably accurate estimate)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AFA 덤핑마진율/상계관세율의 목적은 피조사인에 대한 협조를 장려(incentive)하기 위한 것이지 징벌적(punitive)이거나 이례적인(aberrational), 또는 확증되지 아니한 마진(uncorroborated margins)을 부과하는데 있지 않다”고 밝힘.<sup>17)</sup>

16) NAFTA 제1902조 및 NAFTA 이행법(Implementation Act) 제408조에 따라 NAFTA 회원국은 자국의 반덤핑 상계관세법을 유지, 변경할 수 있으나 개정 시 개별 개정법에서 개정 사항의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

■ [TPEA 제502조] TPEA 제502조에 의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Determinations on basis on Facts Available)’에 관한 1930년 관세법 제776조(19 U.S.C. 1677e)의 (b)항과 (c)항이 개정되고 (d)항이 신설되어, 미국 조사당국의 정보사용 재량권이 강화됨.

- [제776조 (b)항 개정] TPEA 제502조에 의해 1930년 관세법 제776조 (b)항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s, 이하 FA) (1)(B)에 “만약 이해당사자가 정보요청에 응했다면 이해당사자가 제공했을 정보에 대한 여하한 추정에 근거하여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가 추가되어, 美 상무부 또는 미국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USITC)가 비협조적인 수출자에 대해 AFA를 적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율/상계관세율을 부과하는 재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표 10.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b)항 개정

| 19 U.S. Code § 1677e<br>- Determinations on basis of facts available                                                                                                                                                                                                                                                                                                                                                                                                                                                                                                                                                                                                                                                                                                                                                                                                                        |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br>(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번역                                                                                                                                                                                                                                                                                              |
|---------------------------------------------------------------------------------------------------------------------------------------------------------------------------------------------------------------------------------------------------------------------------------------------------------------------------------------------------------------------------------------------------------------------------------------------------------------------------------------------------------------------------------------------------------------------------------------------------------------------------------------------------------------------------------------------------------------------------------------------------------------------------------------------------------------------------------------------------------------------------------------------|-----------------------------------------------------------------------------------------------------------------------------------------------------------------------------------------------------------------------------------------------------------------------------------------------------------------------------------------------|
| (b) Adverse inferences<br>(1) In general<br>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finds that an interested party has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in reaching the applicable determination under this subtitle—<br>(A) may use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in selecting from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and<br>(B) <u>is not required to determine, or make any adjustments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if the interested party had complied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u> | (b) 불리한 추론<br>(1) 일반<br>만약 행정당국 또는 USITC는 이해당사자가 행정당국 또는 USITC로부터 정보요청에 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협조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br>(A) 달리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otherwise available)을 선택함에 있어 그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다.<br>(B) <u>만약 이해당사자가 정보요청에 응했다면 이해당사자가 제공했을 정보에 대한 여하한 추정에 근거하여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u> |

주: TPEA 제502조에 의해 추가된 부분 밑줄표시 .

17) An AFA rate must be “a reasonably accurate estimate of the respondent’s actual rate, albeit with some built-in increase intended as a deterrent to non-compliance”. The purpose of the AFA rate “is to provide respondents with an incentive to cooperate, not to impose punitive, aberrational, or uncorroborated margins.”  
 GALLANT OCEAN THAILAND CO LTD v. UNITED STATES 사건(Fed. Cir. 2010), <http://caselaw.findlaw.com/us-federal-circuit/1522084.html>(검색일: 2018. 3. 3).

- [제776조 (c)항] TPEA 제502조에 의해 1930년 관세법 제776조 (c)(2)에 “동일한 절차<sup>18)</sup>상의 별개 부분(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에서 적용된 모든 덤핑마진 또는 상계관세를 확증<sup>19)</sup>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가 추가되어 행정당국 및 USITC는 2차적인 정보<sup>20)</sup>의 확증에 대한 의무가 완화됨.
- 미 관세법 제776 (c)조는 원칙적으로(in general) 상무부가 조사 과정상 획득된 정보가 아니라 2차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확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예외가 신설되어 동일한 절차의 별개 부분에서 적용된 모든 마진율/상계관세율을 확증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입증 부담이 적어짐.

표 11.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c)항 개정

| 19 U.S. Code § 1677e<br>- Determinations on basis of facts available                                                                                                                                                                                                                                                                                                                                                                                                                                                                                                                                                                                                                                                                   |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br>(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번역                                                                                                                                                                                                                            |
|----------------------------------------------------------------------------------------------------------------------------------------------------------------------------------------------------------------------------------------------------------------------------------------------------------------------------------------------------------------------------------------------------------------------------------------------------------------------------------------------------------------------------------------------------------------------------------------------------------------------------------------------------------------------------------------------------------------------------------------|-----------------------------------------------------------------------------------------------------------------------------------------------------------------------------------------------------------------------------------------------------------------------------|
| <p>(c) Corroboration of secondary information</p> <p>(1) <u>In general</u></p> <p><u>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whe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relies on secondary information rather than on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r review,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corroborate that information from independent sources that are reasonably at their disposal.</u></p> <p>(2) <u>Exception</u></p> <p><u>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shall not be required to corroborate any dumping margin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u></p> | <p>(c) 2차적인 정보의 확증</p> <p>(1) 일반</p> <p>제2문단을 제외하고, 행정당국 또는 USITC는 조사 또는 재심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보다는 2차적인 정보에 의지할 경우, 행정당국 또는 USITC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확증하여야 한다.</p> <p>(2) 예외</p> <p>행정당국 및 USITC는 동일한 절차의 별개 부분에 적용된 어떠한 덤핑마진이나 상계관세를 확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p> |

주: TPEA 제502조에 의해 추가된 부분 밑줄 표시.

- [제776조 (d)항] TPEA 제502조에 의해 1930년 관세법 제776조 (d)항이 신설되어 상무부가 불리한 추론 등을 통해 나온 최고율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불리한 추정과 함께 이용 가능한 사실을 선택하는 경우, 만일 협조하는 데 실패한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였더라면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덤핑마진이 어떠했어야 하는지를 상무부가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덤핑 마진이 상업적 현실(alleged commercial reality)을 반영하는지를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부담을 완화함.
-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재량과 부담완화는 최고율 선택 및 상업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의적인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덤핑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유의할 필요가 있음.

18) 동일한 절차란 특정 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선행 재심 또는 원심을 말함.

19) 확증(corroborate)이란 추가적인 증거나 추론으로 변론이나 범죄사실 따위를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말함.

20) 2차적인 정보(secondary information)란 당해 조사의 신청서, 조사대상 제품에 관한 최종판정 또는 조사대상 제품에 관한 기존 美 1930년 관세법 751조에 의한 재심 등으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말함.

표 12.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d)항 신설

| 19 U.S. Code § 1677e<br>- Determinations on basis of facts available                                                                                                                                                                                                                                                                                                                                                                                                                                                                                                                                                                                                                                                                                                                                                                                                                                                                                 |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br>(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번역                                                                                                                                                                                                                                                                                                                                                                                                           |
|------------------------------------------------------------------------------------------------------------------------------------------------------------------------------------------------------------------------------------------------------------------------------------------------------------------------------------------------------------------------------------------------------------------------------------------------------------------------------------------------------------------------------------------------------------------------------------------------------------------------------------------------------------------------------------------------------------------------------------------------------------------------------------------------------------------------------------------------------------------------------------------------------------------------------------------------------|------------------------------------------------------------------------------------------------------------------------------------------------------------------------------------------------------------------------------------------------------------------------------------------------------------------------------------------------------------------------------------------------------------------------------------------------------------|
| <p>(d) <u>Subsidy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adverse inference determinations</u></p> <p>(1) <u>In general</u></p> <p>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a party under subsection (b)(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p> <p>(A) <u>in the case of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u></p> <p>(i) <u>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applied for the same or similar program in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or</u></p> <p>(ii) <u>if there is no same or similar program,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for a subsidy program from a proceeding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considers reasonable to use; and</u></p> <p>(B) <u>in the case of an antidumping duty processing, use any dumping margin from any segment of the proceeding under the applicable antidumping order.</u></p> | <p>(d) <u>불리한 추론 결정에 있어서의 보조금률 및 덤핑마진</u></p> <p>(1) <u>일반</u></p> <p>행정당국이 달리 이용 가능한 사실 중 선택하는 데 있어 (b)(1)(A)하의 이해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사용할 경우 행정당국은</p> <p>(A) <u>상계관세 절차의 경우</u></p> <p>(i) <u>동일한 국가가 관여된 상계관세 절차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적용된 상계 가능한 보조금률을 사용할 수 있다.</u></p> <p>(ii) <u>만약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행정당국이 사용하기에 합리적이라고 보는 절차에서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률을 사용할 수 있다.</u></p> <p>(B) <u>반덤핑관세 절차의 경우, 적용 가능한 반덤핑 명령하의 절차의 모든 부분으로부터의 덤핑마진을 사용할 수 있다.</u></p> |
| <p>(2) <u>Discretion to apply highest rate</u></p> <p>In carrying out paragraph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apply any of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or dumping margins specified under that paragraph, including the highest such rate or margin, based on the evaluation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the situation that resulted i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ing an adverse inference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p>                                                                                                                                                                                                                                                                                                                                                                                                                                                                              | <p>(2) <u>최고율 적용 재량</u></p> <p>(1)항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당국은 달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선택할 때 불리한 추론을 적용하게 된 해당 상황에 대해 행정당국이 내린 평가에 기초하여, 최고율 또는 마진을 포함한 (1)문단하에 구체화된 어떠한 상계 가능한 보조금률 또는 덤핑마진도 적용할 수 있다.</p>                                                                                                                                                                                                                                                                     |
| <p>(3) <u>No obligation to make certain estimates or address certain claims</u></p> <p>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adverse inference under subsection (b)(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s not required, for purposes of subsection (c ) or for any other purpose-</p> <p>(A) <u>to estimate w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would have been if the</u></p>                                                                                                                                                                                                                                                                                                                                                                                                                                                                                                           | <p>(3) <u>추정 또는 제소를 다룰 의무 면제</u></p> <p>만약 행정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 중 (b)(1)(A)의 불리한 추론을 적용한 경우, 행정당국은 (c) 또는 다른 목적상</p> <p>(A) (b)(1)하의 협조하는 데 실패한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였더라면 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덤핑마진이 어떠했어야 하는지를 상무부가 평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p> <p>(B) <u>상계가능 보조금률 또는 덤핑마진이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상업적 현실(alleged commercial reality)</u></p>                                                                                                                                                      |

interested party found to have failed to cooperate under subsection (b) (1) had cooperated; or  
(B) to demonstrate t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us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flects an alleged commercial reality of the interested party.

을 반영하는지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 TPEA 제502조에 의해 추가된 부분 밑줄 표시.

■ [현황] 이러한 법 개정기에 따라 행정당국의 재량은 대폭 강화되고 입증 등에 있어서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어 이후 많은 조사에서 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상계가능 보조금률 및 덤핑마진이 책정되고 있음.

- AFA 미적용 시 한 자릿수 내에 불과했던 덤핑마진율이, AFA가 적용될 경우 50%를 초과하는 마진율이 산정됨.

표 13. 미국의 AFA 적용 기업수 및 덤핑마진(평균) 추이

|       | 기업수(개사) |        | 덤핑마진(%) |        |
|-------|---------|--------|---------|--------|
|       | AFA 미적용 | AFA 적용 | AFA 미적용 | AFA 적용 |
| 2012년 | 17      | 9      | 15.95   | 67.58  |
| 2013년 | 0       | 1      | -       | 29.98  |
| 2014년 | 27      | 23     | 14.52   | 120.07 |
| 2015년 | 10      | 5      | 23.40   | 25.44  |
| 2016년 | 30      | 29     | 9.14    | 46.13  |
| 2017년 | 37      | 40     | 20.16   | 108.03 |

주: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국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2018),<sup>21)</sup> p. 4.

-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2018년 2월 14일 현재까지 총 8건의 한국 기업조사에 AFA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sup>22)</sup>

표 14. AFA 적용 결과

| 철강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변압기 (반덤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강판(16.5월): 반덤핑 47.80%</li> <li>· 냉연강판(16.7월): 반덤핑 34.33%</li> <li>  (16.8월): 상계 59.72%</li> <li>· 열연강판(16.9월): 반덤핑 9.49%</li> <li>  (16.8월): 상계 58.68%</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재심(18.2월) 최종재판정: 25.51%</li> <li>· 3차재심(17.3월) 최종판정: 60.81%</li> <li>· 4차재심(17.8월) 예비판정: 60.81%</li> </ul>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회부(2018. 2. 14).

-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의 AFA 적용에 대해 美 상무부, 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계속 AFA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sup>23)</sup>하고 2018년 2월 14일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함.

2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2018),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_navi.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4&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768](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_navi.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4&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768)(검색일: 2018. 2. 25).

22)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회부(2018. 2. 14),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0168](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0168)(검색일: 2018. 2. 28).

- 사건명은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이며 사건번호는 DS539로 2018년 3월 1일 카자흐스탄이 협의 참여를 요청한 것에 이어 3월 2일에 EU 및 러시아도 협의 참여의사를 밝힘.<sup>24)</sup>
- 2018년 2월 14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3월 19일 현재 WTO에 보고된 바는 없으나 근시일 내에 미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이 가능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①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거부 ②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 거부 ③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한 경우에만 가용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 피조사기업이 제출하는 정보가 i) 실사 가능(verifiable)하고 ii) 조사에서 지나친 어려움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출되었고 iii) 시의적절하게(in a timely fashion) 제출되었으면 이를 판정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피조사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배척하고 FA를 사용할 수 없는데<sup>25)</sup>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임.

-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요청하고 비협조하였다고 AFA를 적용하거나<sup>26)</sup>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합리적 기간\*이내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설정한 기한의 도과를 이유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거절하였다면 위반에 해당되는바<sup>27)</sup>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은 필요함.<sup>28)</sup>

\* 합리적인 기간 내의 제출여부는 사안별로 개별 조사과정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i) 제출하는 정보의 성격과 분량 (ii) 피조사기업이 직면하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 (iii) 정보의 실사가능성과 조사당국의 판정에 얼마나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 (iv) 정보 사용 시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v) 정보의 접수가 조사당국의 신속한 조사 진행을 저해하는지 여부 (vi) 피조사기업의 기한 도과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음(US-Hot Rolled Steel 사건).<sup>29)</sup>

-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려, 철강업계는 AFA에 제동을 걸 의미 있는 명령이라며 환영을 표한바 있음.<sup>30)</sup>

- 미국의 AFA 적용의 합리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징벌적이거나 이례적인, 또는 입증되지 아니한 마진을 부과하는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업계, 정부 및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23) 한국이 위반이라고 주장한 협정

WTO 반덤핑협정(\$1, \$2.1, \$2.2, \$2.3, \$2.4, \$3.1, \$3.2, \$3.4, \$3.5, \$5.8, \$6.1, \$6.2, \$6.6, \$6.7, \$6.8, \$6.9, \$6.10, \$9.2, \$9.3, \$9.4, \$9.5, \$11.1, \$11.3, \$11.4, \$18.1, \$18.4 및 Annexes I, II); WTO SCM협정(\$1, \$10, \$11.2, \$11.3, \$11.6, \$11.9, \$12.1, \$12.2, \$12.5, \$12.6, \$12.7, \$12.8, \$14, \$15.1, \$15.2, \$15.4, \$15.5, \$19.1, \$19.3, \$19.4, \$21.1, \$21.3, \$21.4, \$32.1, \$32.5 및 Annex VI); GATT 1994(VI:1, VI:2, VI:3); 마라케시 협정(XVI:4조).

24) WTO, DS539: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9\\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9_e.htm)(검색일: 2018. 3. 3).

25) 반덤핑 협정 부속서 제3항.

26) US-Countervailing Measures(China)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피조사국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요청하고 그 피조사국이 정보제공에 비협조하였다고 판단하여 AFA를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협정 제12.7조 위반”이라고 판시함.

27) US-Hot Rolled Steel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이 자동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한을 넘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제출되었다면 조사당국은 FA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함을 판시함.

28) 실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법적검토는 장승화(2017), pp. 7~44 참고.

29) Appellate Body Report, US-Hot Rolled Steel, paras. 84-85; 장승화(2017), p. 17.

30) 당초 미국 상무부는 2015년 12월 16일 예비판정에서 0.18%(미소마진)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9월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AFA를 적용,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함. CIT는 포스코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상무부에 일부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BN(2018. 3. 13), 포스코, 美 상계관세 소송 일부 승소...관세를 낮아지나, <http://ebn.co.kr/news/view/933251>(검색일: 2018. 3. 15).

## 다. 특별한 시장상황(PMS)

■ [PMS]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sup>31)</sup>(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으로 인하여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제3국으로의 수출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관련 규정의 만료와 관련하여 PMS를 활용하여 비시장경제국에 적용되는 조사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미국 상무부는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영향으로 피조사기업 본국의 국내가격 또는 비용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주로 피조사기업의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에 대해 “대체(surrogate)” 시장경제국(특히 조사되는 물품과 비슷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발전에 있어 비교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시장경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하여왔음.<sup>32)</sup>

- WTO 반덤핑협정 제2.1조<sup>33)</sup>에 따르면 덤핑은 수출가격이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데, WTO 반덤핑협정 제2.2조<sup>34)</sup>에서 원칙적으로 수출국 국내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는 동종상품에 대한 통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할 것을 규정함.
- 그러나 만약 수출국의 국내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 의한 동종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거나 PMS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2.2조는 ① 동종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제3국 가격’) 또는 ②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경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은 어떠한 상황을 PMS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결여하고 있어 각국이 저마다의 PMS 판단 재량을 가지고 적용하는데,<sup>35)</sup>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관련 규정의 만료에 맞물려서, 일부 국가의 경우 지금까지 활용해오던 비시장경제국 분류를 통한 조사방식의 적용 대신 PMS를 활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sup>36)</sup>
- 미국도 TPEA 제504조를 도입하여 PMS 적용\*을 통해 비시장경제국에 적용되는 조사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 규정을 통해 비시장경제국이었던 중국뿐 아니라 시장경제국에 대해서도 특정 산업의 왜곡을 이유로 PMS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종전 미국은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구성가격 방식으로 하는 근거로 PMS 조항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31)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은 ‘특별한 시장상황,’ ‘특정시장상황,’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particular이 ‘특정한’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나 외교부(이후 산업부) WTO 협정 공식번역본에서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번역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번역하였음. WTO 반덤핑협정 협정문, <http://motie.go.kr/motie/py/ce/wto/wto.jsp>(검색일: 2018. 2. 18).

32) Matthew R. Nicely & Brian Gatta(2016), pp. 238-239.

33) WTO 반덤핑협정 제2.1조.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상품에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34)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수출국 국내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 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 (footnote2)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의 판매가 고려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율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도 이 낮은 비율은 수락 가능하여야 한다.

35) 호주의 PMS 적용과 관련하여 Weihuan Zhou & Andrew Percival(2016), pp. 160-162 참고.

36) Mikyung Yun(2017), p. 233.

법에서 PMS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WTO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AA)에서 PMS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제안하였기 때문임.<sup>37)</sup>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의 판매가 사용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 매우 엄격한 제한 하에서만 실제가격이 무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하여, PMS는 주로 생산자가 기록한 비용이 부적절한 회계의 결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만 활용되었음.<sup>38)</sup>

- [TPEA 제504조] TPEA 제504조에 따라 美 1930년 관세법 제771조를 개정하여 통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가 아닌 것에 ‘PMS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를 포함하고, 美 1930년 관세법 제773조를 개정하여 PMS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상황이 넓을 수 있도록 하고 PMS의 경우 계산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제771조] 美 1930년 관세법 제771조의 통상적인 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사유에 PMS를 포함함.

표 15.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1조 (15) 개정

| 19 U.S.C. §1677(15)<br>- DEFINITIONS: SPECIAL RULES                                                                                                                                                                                                                                                                                                                                        |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1조<br>(정의; 특별 규칙) 번역                                                                                                                 |
|--------------------------------------------------------------------------------------------------------------------------------------------------------------------------------------------------------------------------------------------------------------------------------------------------------------------------------------------------------------------------------------------|----------------------------------------------------------------------------------------------------------------------------------------------------------|
| <p>(15) Ordinary course of trade.</p> <p>...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p> <p>... (C) Situations in whic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p> | <p>(15) 통상적인 거래</p> <p>... 행정당국은 다음과 같은 판매 및 거래를 통상적인 거래 밖에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p> <p>... (C) 행정당국이 PMS로 인해 수출가격 또는 구성 수출 가격과의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인 경우</p> |

주: TPEA 제504조에 의해 추가된 부분 밑줄 표시.

- [제773조] 美 1930년 관세법 제773조의 구성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원자재 및 제조비용 또는 기타 가공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PMS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이 절의 다른 계산방식 또는 기타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를 추가함.

- 원자재 및 제조비용 또는 기타 가공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PMS가 존재한다고 보아 PMS가 인정될 상황이 넓을 수 있도록 하고 PMS에 해당 시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라고 하여 구성가격 산정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아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조사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며 본 규정을 통해 구성가격 계산에서 용이하게 생산자의 실제 비용을 무시할 수 있음.

\*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전 PMS가 주로 적용되던 회계상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에서 발생한 “왜곡”으로 인한 “실제비용”과 “왜곡되지 않은” 비용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sup>39)40)</sup>

37) Matthew R. Nicely & Brian Gatta(2016), p. 239.

38) *Ibid.*

39) Matthew R. Nicely & Brian Gatta(2016), pp. 239-240.

40) 정찬모(2017)에 따르면, “원료 및 제작 기타 가공비용이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 통상적 회계방법을 사용하여 정직하게 장부를 기재하는 것을 넘어서 원료 및 제작 기타 가공비용 이외에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지원 등 어떤 간접적 요소도 비용에 왜곡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보고 이런 왜곡이 없는 경우만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함. 정찬모(2017), p. 53.

표 16.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3조 (e) 개정

| 19 U.S. Code § 1677b(e)<br>- DEFINITION OF CONSTRUCTED VALUES                                                                                                                                                                                                                                                                                                                                                                                                                                                                                                                                                                                                                                                                                                                                                                                                                                                                                                                                                                                                                 | 개정된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3조<br>(구성가격의 정의) 번역                                                                                                                                                                                                                                                                                                                                                 |
|-------------------------------------------------------------------------------------------------------------------------------------------------------------------------------------------------------------------------------------------------------------------------------------------------------------------------------------------------------------------------------------------------------------------------------------------------------------------------------------------------------------------------------------------------------------------------------------------------------------------------------------------------------------------------------------------------------------------------------------------------------------------------------------------------------------------------------------------------------------------------------------------------------------------------------------------------------------------------------------------------------------------------------------------------------------------------------|-----------------------------------------------------------------------------------------------------------------------------------------------------------------------------------------------------------------------------------------------------------------------------------------------------------------------------------------------------------------------------------------|
| <p>(e) Constructed value.<br/>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the constructed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p> <p>(1)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merchandise,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e merchand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p> <p><u>For purposes of paragraph (1), i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such that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under this part or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ost of materials shall b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internal tax in the exporting country imposed on such materials or their disposition that is remitted or refunded upon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produced from such materials.</u></p> | <p>(e) 구성가격<br/>이 하부조항의 목적상, 수입품의 구성가격은 아래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한다.</p> <p>(1) 원자재 및 제조비용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타가공비용,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 제품의 생산</p> <p><u>(1) 문단의 목적상, 원자재 및 제조비용 또는 기타 가공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PMS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이 절의 다른 계산방식 또는 기타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문단의 목적상 원자재의 비용은, 그러한 원자재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되는 원자재 또는 그 처분에 부과되는 수출국의 내국세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한다.</u></p> |

주: TPEA 제504조에 의해 추가된 부분 밑줄 표시.

■ [현황] 시장경제국의 제품인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2차 재심에서 최초로 TPEA 제504조에 따라 PMS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대신 제3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구성가격을 산정, 고율의 덤핑마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함.

- 미국 상무부는 TPEA 제504조를 통해 개정된 특수시장상황을 적용하여 2016년 10월 3일 한국산 유정용강의 열연강관의 가격 왜곡을 지적하며 연례재심 반덤핑관세율을 이전보다 높게 산정함.
- o 2016년 10월에 있었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열연코일 원가가 비정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o 그러나 그 후 트럼프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 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PMS 적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고 예비판정 이래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적인 증거나 의혹이 제기된 바 없음에도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위 네 개 요소들을 종합적(collectively)으로 검토한 결과 PMS가 존재한다고 보고 고율의 덤핑관세<sup>41)</sup> 부과를 결정함.

41) 예비판정에서 벡스틸 8.04%, 세아제강에 3.80%, 현대제철 5.92%로 판단하였으나 1차 연도 연례재심에서 벡스틸에 24.92%, 세아제강에 2.76%, 현대제철 등 기타 13.84%로 세아제강을 제외하고 덤핑관세율이 상향 조정됨.

표 17. 한국산 OCTG 연례 재심 시 PMS 규정 판정

|     | 미국 철강기업의 주장                                                                       | 피제조기업의 주장                                                                                                                                       |
|-----|-----------------------------------------------------------------------------------|-------------------------------------------------------------------------------------------------------------------------------------------------|
| 협의1 | 중국산 열연코일이 저가로 수입되어 OCTG의 한국내 원자재인 열연의 가격이 인하되어 OCTG 원가를 왜곡하고 있음.                  | 중국 철강제품의 과잉생산능력과 과잉공급은 전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므로 PMS에 해당되지 않음.                                                                 |
| 협의2 | 한국 내 열연 제품에 대해 정부가의 과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제조자는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공정판정과 본 사건 반덤핑 조사절차간의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br>-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계산된 60% 보조금율은 한국 조사기업의 비협조에 따른 AFA를 적용하여 계산된 보조금율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 협의3 | OCTG 원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열연 생산자와 OCTG 생산자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열연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 - 중국산 열연제품이 한국에 넘쳐난다고 주장하면서 열연 생산자와 OCTG 생산자 사이에 의도적인 전략적 제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적임, 전략적 제휴관계가 있다면 중국과 같은 다른 파트너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할 이유가 없음.                |
| 협의4 | 한국 정부의 전기가격정책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 - 상무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전기는 원가 미만의 판매도 아니고 열연이나 OCTG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왔음.                                                                         |

## 예비판정

한국에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



## 최종판정

개별적으로(individually) 판단할 때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직접 비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생산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충분히 설득할 만큼 입증이 되지 않았으나 제조사의 4가지 주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 시 한국의 OCTG 시장에 누적적인 영향(cumulative effect)을 주었음에 근거하여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

자료: 주현수(2017), pp. 43~48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 [검토] PMS 관련 미국의 관행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WTO 반덤핑협정은 어떠한 상황을 PMS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법도 PMS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짓고 있지 않아 다양한 구실로 PMS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PMS로 인정 시 개정 내용에 따라 비시장경제국에 적용되는 산정방식도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는 PMS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제3국 수출시 가격 또는 구성가격과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PMS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PMS로 인해 수출국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지(incomparability)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PMS로 인한 수출국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면 PMS를 이유로 제3국 수출 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수출가격과 비교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임.<sup>42)</sup>
- EU-Biodiesel 사건에서 상소기구도 제2.2.1.1조상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조사대상인 특정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진정한 관계(genuine relationship)에 있어야 한다며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EU가 바이오디젤 정상가격 산정 시 아르헨티나에서의 생산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점 및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의 기록에 근거하여 바이오디젤 생산비용을 결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덤핑 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 위반을 판시한 바 있음.
- OCTG 사건에서 특정 국가나 회사의 원료 또는 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PMS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 남용이 우려되며, 수출국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에 차이 있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PMS를 적용하여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무시한 것은 WTO 협정 위반소지가 있음.

42) Mikyung Yun(2017), pp. 237-238.

-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는 PMS 존재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사안의 “개별적” 검토 시에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라도 “종합적” 검토시에는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증방법의 채택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입증방법이 과연 법리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 및 이의제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TPEA 504조에서 특정 방법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바 EU-Biodiesel 사건에서처럼 as such 제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국산 OCTG 최종판정에서 PMS를 들어 구성가격의 사용 권한을 확대하여 고율의 반덤핑마진을 산정한 적용에 대해서는 as applied 제소에서 승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WTO를 통한 문제제기는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을 요하는바 한국기업 넥스틸이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음.<sup>43)</sup>

## 라. 평가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017년 발표한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sup>44)</sup>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 중 수입규제 중이거나 규제를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품목의 비중을 추정 시 한국이 1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견제로 인한 중국과 상당 부분 수출품목이 유사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되었음.

표 18. 미국의 교역 상대국과 미국통상법하의 수입규제조치의 효과

| 국가   | 수입하는 품목 중 규제 또는 조사 중 품목<br>금액(십억 달러) |           | 수입하는 품목 중 규제 또는 조사 중<br>품목비중(%) |           |
|------|--------------------------------------|-----------|---------------------------------|-----------|
|      | 2016년                                | 2017년(추정) | 2016년                           | 2017년(추정) |
| 중국   | 44.3                                 | 52.3      | 9.2                             | 10.9      |
| 멕시코  | 4.7                                  | 12.8      | 1.6                             | 4.5       |
| 캐나다  | 2.6                                  | 23.4      | 1.0                             | 8.8       |
| 일본   | 3.1                                  | 6.6       | 2.3                             | 4.9       |
| 독일   | 0.6                                  | 3.7       | 0.5                             | 3.4       |
| 한국   | 5.8                                  | 8.9       | 7.9                             | 12.2      |
| 영국   | 0.3                                  | 1.4       | 0.7                             | 2.7       |
| 프랑스  | 0.6                                  | 1.7       | 1.4                             | 3.8       |
| 인도   | 3.3                                  | 4.6       | 6.9                             | 9.5       |
| 아일랜드 | 0.0                                  | 0.1       | 0.0                             | 0.1       |
| 기타   | 17.2                                 | 46.4      | 4.2                             | 7.2       |
| 총합   | 82.5                                 | 161.9     | 3.8                             | 7.4       |

자료: PIIE(2017), p. 10.

43) 더벨(2018. 2. 22), '수출량 1위' 넥스틸, 비상경영체제 돌입,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210100037850002337&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210100037850002337&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검색일: 2018. 2. 27).

44) PIIE,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s Stealth Trade Protection, <https://piie.com/system/files/documents/pb17-21.pdf>(검색일: 2018. 2. 22).

■ AFA 및 PMS 적용으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될 경우 연례재심의 활용, 미국무역법원 제소 또는 WTO 제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후적 구제수단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과 반덤핑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려 시 사전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sup>45)</sup>

- 우리나라는 현재 AFA와 관련한 미국의 덤핑관행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상태인바 철저히 준비하여 기존의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
- OCTG 연관 사건과 관련하여 PMS의 무분별한 적용이 타당한지, PMS로 인해 수출국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하고 이러한 지나친 재량을 제한할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업계는 중국과 수출경합이 있는 품목 및 중국산 원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품목 등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대비하여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3. EU 무역구제 관련 법 개정 및 적용

#### 가. 법 개정 배경

■ 개정 전 EU는 EU 반덤핑규칙<sup>46)</sup>(2016/1036)에<sup>47)</sup>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는데 반덤핑규칙 제2조는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이에 포함되는 개별 국가를 나열하고<sup>48)</sup>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인지 시장경제국인지에 따라 덤핑마진의 산정방식에 차이를 두었음.

- 시장경제국인 경우에는 정상가격 판단 시 수출국에서의 국내가격을 활용하나, 비시장경제국인 경우에는 대체 시장경제국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고 개별 수출가격을 매겨 개별 덤핑마진이 주로 매겨지는데 조사대상이 많아서 조사대상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샘플링된 수출업자는 개별 덤핑마진이 부과되나 샘플링되지 않은 수출업자는 일괄적으로 덤핑마진이 매겨지는 방식이었음.
- 만약 해당 기업이 제2.7조 (c)상의 모든 요건<sup>49)</sup>에 따라 시장경제 상황하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시장

45)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2017. 12), p. 15.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7&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767](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7&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767)(검색일: 2017. 3. 1).

46) 규칙(Regulation)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EU 회원국에 대해서 직접 적용되며 구속력을 가지는 법임. 참고로 준칙(또는 지침, Directives)은 달성되어야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그 방식 및 수단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에게 위임되어 있는 법임. 그 밖에 결정(Decisions)은 특정 인(회원국, 개인, 법인)을 구속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또는 유럽의회가 결정하는 사항을 말하며, 권고(Recommendation), 의견(Opinion)은 구속력 없는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의사표시를 일컫음.

47) Regulation(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2016] OJ L176/21.

48) WTO 회원국 중에는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이 있으며(EU 반덤핑규칙 제2.7조 (b)조) 그 밖에도 북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포함(제2.7(a)조).

49) ① 기업의 의사결정이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시장의 신호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상당한 간섭 없이 결정되고, 주요 자원의 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② 기업의 회계기록이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의 대상이 되고, 모든 목적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 ③ 기업의 생산비용과 재무구조가 종전의 NME의 영향으로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④ 관련 기업이 기업의 운영에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파산법과 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⑤ 환율이 시장 환율에 따라 변환되고 있는지 여부(정동원, 배연재 (2017), p. 20 인용).

경제대우를 적용받았음.

표 19. EU의 NME와 시장경제국의 반덤핑조사 방식

|                         | NME (ex. 중국, 베트남) |          |               | 시장경제국       |
|-------------------------|-------------------|----------|---------------|-------------|
|                         | 개별 대우             | 개별대우 X   | 예외(시장경제 입 증시) |             |
| 정상가격                    | 대체국 방식            | 대체국 방식   | 수출국에서의 국내가격   | 수출국에서의 국내가격 |
| 수출가격                    | 개별 수출가격           | 단일 수출가격  | 개별 수출가격       | 개별 수출가격     |
| 덤핑마진<br>(=정상가격-수출가격)    | 개별 기업별 책정         | 단일 덤핑마진  | 개별 기업별 책정     | 개별 기업별 책정   |
| 반덤핑관세<br>(덤핑마진을 기초로 산정) | 개별 기업별 책정         | 일괄적으로 책정 | 개별 기업별 책정     | 개별 기업별 책정   |

■ 2016년 12월부터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에 적용하는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워지고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여 EU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 EU는 반덤핑 관련 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낌

- EU는 중국의 철강을 비롯하여 태양광패널, 이동통신 장비, 포도주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중국산 수입 급증에 따른 회원국의 피해를 염려하였으며 이에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요청에도 거듭 거절해왔음.
- 2016년 12월부터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에 적용하는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덤핑 마진의 산정방식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별하던 것을 철폐하고, 비시장경제국의 목록방식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접근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20. EU의 반덤핑규칙(2017/2321) 도입 주요 과정

| 일시            | 주요 사건                                                                                                                                                                                             |
|---------------|---------------------------------------------------------------------------------------------------------------------------------------------------------------------------------------------------|
| 2015년 11월     | EU 집행위에서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일부 조항 실효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br>유럽의회 조사서비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에서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의 일부 조항이 실효됨에 따른 법적 분석 및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 <sup>50)</sup> 발간 |
| 2016년 2월      | EU 집행위는 2월 10일부터 10주간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함.                                                                                                                                            |
| 2016년 5월 12일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결의를 채택함.<br>- 중국이 EU 반덤핑규칙 제2.7조(c)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
| 2016년 11월 19일 | EU 집행위가 새로운 반덤핑규칙 개정안을 제안함.<br>-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조사 기준과 마진 산정방식 변경을 제안                                                                                                                            |
| 2017년 12월 20일 | 개정 반덤핑규칙 (2017/2321) 발효<br>중국에 대한 시장 왜곡 보고서 발간                                                                                                                                                    |

50)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Granting of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5/571325/EPRS\\_IDA\(2015\)571325\\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5/571325/EPRS_IDA(2015)571325_EN.pdf)(검색일: 2017. 3. 4).

- EU 집행위(EU Commission)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실효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고서<sup>51)</sup>를 발간하고 2016년 새로운 반덤핑규칙 개정안을 제안하여 2017년 12월 20일 개정 반덤핑규칙(2017/2321)이 발효하고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나. 개정 주요 내용

■ [개관] EU는 개정 반덤핑규칙(2017/2321)<sup>52)</sup>을 통해 기존의 무역구제관련 법<sup>53)</sup>(반덤핑규칙 2016/1036<sup>54)</sup> 및 상계관세 규칙 2016/1037<sup>55)</sup>을 일부 개정함.

- EU 집행위가 밝힌<sup>56)</sup> 개정의 구체적 목적은 ① 중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고려하여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 15조의 일부 조항의 실효에 대한 대응 ② EU의 무역구제제도의 계속적인 효과성 보장 ③ 중국 및 다른 비시장경제국의 지속적인 왜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제공 ④ 덤핑수입품에 의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보장 ⑤ EU 무역상대국과의 강한 유대관계 유지임.
- 이번 개정을 통해 EU 집행위는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만료에도 중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EU 무역상대국과 강한 유대관계 유지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미국, 일본 등과 중국 견제에 있어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임.
- 개정의 주요 변화는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중대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EU는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파산 법 등의 부적절성, 낮은 급여, 값싼 금융 등이 존재하는 경우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보아, 이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의 제3국의 생산가/판매가, 국제가격 등을 정상가 산정에 참고하게 됨.

■ [제2조 6a 신설] 제2조에 6a를 신설하여 시장경제국/비시장경제국 개념 대신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s)’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음.

- [6a(a) 중대한 왜곡인 경우 조사 방식] 제2조 6a(a)에서는 중대한 왜곡이 수출국에 존재하여 수출국 국내 가격 및

5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Possible change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dumping regar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and other non-market economies), SWD(2016) 370 final(9 Nov. 2016).

52) Regulation(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2017:338:FULL&from=EN>(검색일: 2017. 3. 2).

53) 반덤핑 규정(2016/1036) 상계관세 규정(2016/1037) 세이프가드 규정(2015/478, 2015/755).

54) Regulation(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2016] OJ L176/21,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june/tradoc\\_154702.en.L176-2016.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june/tradoc_154702.en.L176-2016.pdf)(검색일: 2017. 3. 2).

55) Regulation(EU) 2016/10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june/tradoc\\_154703.en.L176-2016.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june/tradoc_154703.en.L176-2016.pdf)(검색일: 2017. 3. 2).

5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Possible change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dumping regar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and other non-market economies), SWD(2016) 370 final(9. Nov. 2016), p. 21,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november/tradoc\\_155080.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november/tradoc_155080.pdf)(검색일: 2017. 3. 4).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왜곡되지 않은 가격과 벤치마크를 반영한 생산 및 판매의 비용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할 것을 적시함.

- 집행위는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① 수출국의 경제 발전과 비슷한 수준의 적절한 대표 국가(제 3국)의 생산과 판매의 비용(만약 그러한 국가가 2개 이상이라면 사회/환경 보호 수준이 적절한 국가가 우선됨) ② 적절한 경우 왜곡되지 않은 국제 가격, 비용 또는 기준가격(benchmark) ③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고 적절한 증거에 기초한 범위에 한하여 수출국 국내 비용이 사용될 수 있음. 구성 정상가격은 왜곡되지 않고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포함하여야 함.
- 집행위가 조사 중인 수출국과 경제적 개발 수준이 비슷한 적절한 대표국 선정 시 사회/환경 보호 수준(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EU 집행위의 Fact Sheet에 따르면 이는 ‘무역 구제(trade defence)’에 있어서 처음으로 ‘사회/환경 보호 수준’이 역할을 하게 된 것임.<sup>57)</sup>
- [6a(b) 중대한 왜곡 판단기준 제2조 6a(b)에서는 “중대한 왜곡은 보고된 가격 또는 비용(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포함)이 정부 개입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 자유시장의 힘(free market force)의 결과가 아닐 때 발생한다”며 중대한 왜곡의 존재를 평가하는 데 고려 요소를 적시함.
- 중대한 왜곡 판단 고려 요소로는 ①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②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③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④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 등의 결여 및 부적절성 ⑤ 낮은 급여 ⑥ 금융 왜곡 등을 들고 있음.

표 21. 중대한 왜곡 판단 고려 요소

| 키워드                    | 고려요소                                                                                                                                                                                                                                                                           |
|------------------------|--------------------------------------------------------------------------------------------------------------------------------------------------------------------------------------------------------------------------------------------------------------------------------|
|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 문제되는 시장이 수출국의 소유, 통제 또는 정책 감독 또는 지도하에 운영되는 기업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채워지고 있는지 여부<br>(the market in question being served to a significant extent by enterprises which operate under the ownership, control or policy supervision or guidance of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
| 가격/비용에서의 개입            | 가격 또는 비용 관련하여 기업에 대해 국가 개입이 가능한지 여부<br>(State presence in firms allowing the State to interfere with respect to prices or costs)                                                                                                                                               |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 공공정책 또는 조치가 국내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차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장의 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br>(public policies or measures discriminating in favour of domestic suppliers or otherwise influencing free market forces)                                                                                         |
| 파산 법, 기업법, 재산권 법의 부적절성 | 파산법, 기업법 또는 재산권법의 결여, 차별적인 적용 또는 부적절한 이행이 있는지 여부<br>(the lack, discriminatory application or inadequate enforcement of bankruptcy, corporate or property laws)                                                                                                                 |
| 낮은 급여                  | 급여 비용이 왜곡되어 있는지 여부<br>(wage costs being distorted)                                                                                                                                                                                                                             |
| 금융 왜곡<br>(값싼 금융)       | 공공정책 목적을 이행하는, 아니면 정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금융으로의 접근이 있는지 여부<br>(access to finance granted by institutions which implement public policy objectives or otherwise not acting independently of the State)                                                                    |

57) European Commission - Fact Sheet, The EU's new trade defence rules and first country report(20. Dec. 20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검색일: 2017. 3. 7).

- 2017/2321 서문(recitals) (4)에서는 “중대한 왜곡의 존재를 평가 시 적절한 경우 국제노동기구의 핵심적인 협약과 관련 다자간 환경 협약을 포함한 관련 국제 규범을 고려한다”<sup>58)</sup>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 6a(b)의 고려 요소에는 빠져 있음.
- [6a(c) 왜곡 보고서 발간] 제2조 6a(c)에서는 집행위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sector)의 중대한 왜곡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규정함.
- ‘집행위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특정 분야에 있어 (b)에서 언급한 중대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징후(well-founded indication)를 가지고 있거나, 이 반덤핑규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적절할 경우, 집행위는 그 국가 또는 분야에 있어 (b)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묘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규정함.
- 그 밖에 EU 업계가 당해 보고서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sup>59)</sup> EU 집행위가 중대한 왜곡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에 기초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sup>60)</sup>고 규정함.
- 이에 따라 EU 업계는 소 제기 또는 재심 요청 시 당해 보고서의 증거에 의존할 수 있어 EU 업계의 정보수집상 어려움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EU 회원국 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심사가 가능한바 특정 산업분야나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무역구제조치의 양적 증가가 우려됨.

■ [WTO 법과의 합치성 검토] EU의 개정된 반덤핑규칙상 ‘중대한 왜곡’ 기준은 WTO 반덤핑협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WTO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함.

- EU 집행위의 개정 법안 입안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Fieldfisher 법무법인의 Laurent Ruessmann 변호사는 동 보고서가 중국 시장 전반에 걸친 중대한 왜곡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EU의 반덤핑 규칙에는 명시적으로 중국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위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규정 그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봄.<sup>61)</sup>
- 그러나 EU-Biodiesel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EU가 아르헨티나 생산자의 대두 구매비용이 왜곡되어 국제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생산자의 구성 정상가격을 계산 시 대두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sup>62)</sup>가 ‘원산지국의 생산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1.1조<sup>63)</sup>에서 생산

58) “When assessing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stortions,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core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and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nven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re appropriate.”

59) EU 반덤핑규칙 제2조 6a(d).

60) EU 반덤핑규칙 제2조 6a(e).

61)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산업계, ‘상당한 시장왜곡’ 존재 인정한 중국 시장보고서 환영(2018. 1. 5),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0/index.jsp?sCmd=VIEW&nPostIndex=1775760>(검색일: 2018. 2. 20).

62)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수출국의 국내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 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 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63)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

제2항의 목적상,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당국은 조사기간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거를 포함,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단, 이러한 비용의 할당은 특히 적절한 분할상환 및 감가상각기간의 설정, 자본지출 및 다른 개발비용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전례적으로 활용되어온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따른 비용할당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 현재 및/또는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주는 일회성비용항목 또는 생산개시 기동으로 인하여 조사기간 중 비용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용이 적절히 조정된다.

비용 계산 시 수출자의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sup>64)</sup>

- 동 판결에 따르면,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에 따라 수출자의 기록을 실제 비용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EU 반덤핑규칙 제2조 6a(a)에서는 중대한 왜곡이 수출국에 존재할 경우 경제발전이 비슷한 수준의 국가의 생산판매비용, 왜곡되지 않은 국제가격, 비용 또는 기준가격 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중대한 왜곡을 근거로 국내 비용 외의 다른 비용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이 산정된다면 이는 WTO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WTO 분쟁해결기구로의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EU 개정 반덤핑규칙에 대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한 분쟁(DS516)<sup>65)</sup>에서 WTO 협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분쟁 제기 시에 EU 개정 반덤핑규칙은 발효되기 전이었으나 이미 반덤핑규칙 개정안은 있던 상태로 중국의 패널 요청서(China's panel request)<sup>66)</sup>에서 각주 2는 '개정안에 의해 개시된 입법 절차에 따른 반덤핑규칙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이 요청은 포함한다'<sup>67)</sup>고 적시하고 있어 이 분쟁에서 EU의 개정 반덤핑규칙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

■ [현황] EU 집행위는 2017년 12월 20일 새로운 반덤핑규칙 발효와 함께 '무역구제조사의 목적을 위한 중국경제의 중대한 왜곡에 관한 집행위 작업 보고서'(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이하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sup>68)</sup>를 발표하였음.

- 반덤핑규칙 제2조 6a(c)에 따라 EU 집행위는 중대한 왜곡이 발생하는 국가와 산업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하는바, EU 집행위는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표함.
- EU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EU의 무역구제조사 활동이 주로 중국에 대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중국과 관련한 반덤핑사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자동적이지는 않으며 해당 사건에서 새로운 방법이 사용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함.<sup>69)</sup>
- 반덤핑 제소 및 재심 요청에 EU 업계는 이 보고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개별 조사의 사건 파일에 담길 기술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466쪽 분량의 보고서로 Part1. 범분야 왜곡/Part.2 생산요소에서의 왜곡/Part3. 특정분야에서의 왜곡으로 나뉘어 있음.

64) EU-Biodiesel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희진(2017), pp. 71~106 참고.

65)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관련 EU에 대한 제소(DS51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6_e.htm)(검색일: 2018. 2. 28).

66) WT/DS516/9.

67) "This request includes any changes made to the Basic Regulation pursuant to the legislative processes initiated by these proposals."

6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20. Dec. 2017),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7/december/tradoc\\_156474.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7/december/tradoc_156474.pdf)(검색일: 2017. 3. 1).

69) European Commission - Fact Sheet, The EU's new trade defence rules and first country report(20. Dec. 20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검색일: 2017. 3. 1).

- Part1(제2장~제8장)에서는 중국경제의 현재 형태와 구조를 살펴 중국헌법에 담긴 중국시장 경제, 경제 관련 중국의 공산당의 역할, 공산당 지도하의 다양한 수준의 정부와 계획경제, 국유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이하 SOE) 및 금융시장, 공공조달시장 및 투자 심사(screening) 시스템 등을 검토함.
- Part2(제9장~제13장)에서는 생산에서의 다양한 요소를 다루는데 중국의 토지, 에너지, 자본, 원자재, 노동과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을 살펴봄.
- Part3(제14장~제17장)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EU의 반덤핑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인 철강 분야, 알루미늄 분야, 화학제품 분야 및 세라믹 분야에 대해 중국의 구체적인 규범 및 동향을 살펴봄.

표 22.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 목차                                                                        | 다루는 내용                                                                               |
|---------------------------------------------------------------------------|--------------------------------------------------------------------------------------|
| 1. Introduction                                                           | EU 반덤핑규칙 개정 소개, Part1,2,3 내용 소개.                                                     |
| <b>PART I: 범분야 왜곡<br/>(Cross-cutting distortions)</b>                     |                                                                                      |
| 2. 사회주의 시장 경제                                                             | 중국의 법 체제(헌법, 기업법, 재산법, 5개년 계획, 19차 전인대 등), 사회주의 시장 요소(SOE, 산업 개입, 지방정부의 권한, 공급 과잉 등) |
| 3. 중국 공산당                                                                 | 공산당의 지도력, 국가와 당과의 관계, 임명, 공산당과 SOE, 정책과 계획에서의 공산당의 역할                                |
| 4. 계획시스템(The system of plans)                                             | 계획시스템(중국 2025, 일대일로, 공급측면 및 구조개혁, 인터넷+, 제13차 5개년 계획(FYP)등), 계획 이행(구속력, 모니터링/평가 등)    |
| 5. 국유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 SOE 비중, SOE 개혁 평가, SOE에 대한 정부 통제 등                                                   |
| 6.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s)                                               | 중국 금융시스템 개관, 중국 은행, 은행법, 채권시장, 주식시장, 투자 자금, 수출보증시장에서의 정부의 관여, 파산법 등                  |
| 7. 중국의 공공조달시장<br>(Public procurement market in China)                     | 정부조달법, 입찰법 및 이에 대한 이행법에서의 왜곡(Buy Chinese 규정 등)                                       |
| 8.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및 정책 문서, 투자승인절차                                                   |
| <b>PART II: 생산요소에서의 왜곡<br/>(Distortions in the factors of production)</b> |                                                                                      |
| 9. 토지                                                                     | 토지사용권 거래 규칙, 토지사용권 획득, 토지사용권 가격 등                                                    |
| 10. 에너지                                                                   | 에너지 계획, 규제기관, 에너지 가격정책, 생산 과잉(석탄 보조금)                                                |
| 11. 자본                                                                    | 자본 접근, 자본 가격, 기업 빚 관련 이슈                                                             |
| 12. 원자재 및 다른 투입재 원료                                                       | 5개년 계획(미네랄 원료, 철강, 섬유, 임목 등), 원재료 관련 분쟁(희토류 분쟁 등), 수출 제한, 가격 설정, SOE, 투자 제한 등        |
| 13. 노동                                                                    | 노동법, 국제노동기준, 급여, 단체교섭, 법 집행                                                          |
| <b>PART III: 특정 분야에서의 왜곡<br/>(Distortions in selected sectors)</b>        |                                                                                      |
| 14. 철강 분야                                                                 | 규제 프레임워크, SOE, 정부지원조치, 원자재/투입재 왜곡, 공급 과잉 등                                           |
| 15. 알루미늄 분야                                                               | 규제 프레임워크, SOE, 정부지원조치, 공급 과잉 등                                                       |
| 16. 화학 분야                                                                 | 규제 프레임워크, 금융지원, 반덤핑/상계조치 절차에서 발견된 시장 왜곡 등                                            |
| 17. 세라믹 분야                                                                | 규제 프레임워크, 정부지원조치, 정부 개입 등                                                            |

■ [중대한 왜곡]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에서는 공산당이 상당 부분 기업 결정에 관여하고 SOE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 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 토지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동권 제약으로 급여가 낮으며 중국정부의 개입으로 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분야에서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등의 왜곡을 지적함.

- 비록 중국 중앙정부가 공급 과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SOE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음.

표 23. '중대한 왜곡' 기준에 맞춰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대한 왜곡 판단 시 고려 요소     |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에 담긴 관련 내용                                                                                                                                         |
|-----------------------|-----------------------------------------------------------------------------------------------------------------------------------------------------------------------|
| SOE의 시장 장악            | SOE의 높은 비중,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행동. SOE에 대한 혜택 과도(금융지원, 시장접근제한에 따른 보호, 토지 에너지 특혜접근)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왜곡함.                                                                 |
| 가격/비용에서의 개입           | 중국정부의 개입으로 철강, 알루미늄, 화학, 세라믹 등에서 공급 과잉<br>중국정부는 주요 분야의 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토지와 에너지를 공급함.<br>원자재에 대한 가격 통제                                                                  |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 중국정부의 첨단산업 부문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문제 삼음.<br>-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2015)에 따라 2025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등 10대 첨단산업 부문에서 대표 기업을 키워내고자 자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 예정 |
|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 등의 부적절성 | 효과적이고 투명한 파산 절차가 부재하며 매우 왜곡됨.                                                                                                                                         |
| 낮은 급여                 | 노동권을 제한하여 중국 기업들에 큰 이득을 주고 있음.                                                                                                                                        |
| 금융 왜곡                 | 국영은행 비중이 높고 중국정부가 은행을 통제해 매우 왜곡된 금융시스템을 운용하여 저금리 대부분 사업자금을 지원함. 주요 채권 및 신용평가에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높아 왜곡이 발생함.                                                                  |

■ [평가] 중국은 EU 집행위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국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EU의 이번 조치는 이중 잣대에 해당해 위선적이며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 역시 모든 국가는 개별적으로 발전 전략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EU의 처사를 비난함.<sup>70)</sup>

■ [전망] EU 집행위는 계속해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다음에는 러시아의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표할 전망이다.

- EU 집행위는 다른 보고서도 준비될 것이며, 대상국은 정부 개입 관련 왜곡이 있는지 표시(indications)를 비롯하여 EU의 반덤핑활동에 있어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예정이라며 다음 보고서 대상국으로 러시아를 지목함.<sup>71)</sup>
  - 2013~16년 기준 러시아(4건)가 중국(24건), 인도(6건) 다음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3건)도 조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임.<sup>72)</sup>

70) KOTRA, EU, 반덤핑 관련 중국 시장왜곡 보고서 발표(2018. 1. 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4129>(검색일: 2018. 2. 20).

71) European Commission - Fact Sheet, The EU's new trade defence rules and first country report(20. Dec. 20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검색일: 2017. 3. 1).

72) KOTRA, EU, 반덤핑 관련 중국 시장왜곡 보고서 발표(2018. 1. 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4129>(검색일: 2018. 2. 20).

## 라. 평가

■ 이번 반덤핑규칙 개정으로 종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왜곡'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정상가격으로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 아닌 대체국 가격/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됨.

- 이러한 개정은 원래 의도한 대로 과거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시장경제국도 특정 산업 등의 왜곡을 들어 최근 미국이 PMS를 활용하는 것처럼 중국 견제를 넘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
- 2017/2321 서문(1)에서 동 규칙은 시장경제국 여부와 관계없이 “any WTO member”가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어 73) 새로운 반덤핑규칙에서의 ‘중대한 왜곡’ 판단에 있어 넓은 재량을 활용하여 EU 집행위 보고서 및 반덤핑조사 등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EU 집행위의 중대한 왜곡과 관련해서 나온 타국 보고서를 토대로 왜곡으로 비취질 만한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타당한 근거 및 논리를 개발해둘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이 PMS를 적용한 OCTG 사건에서의 제소자 측이 주장하였던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정책 등은 중대한 왜곡 판단 요소 중 가격/비용에서의 국가 개입 등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권심사가 가능해지며, EU 업계가 반덤핑 제소 및 재심 등에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활용하여 덤핑 제소가 증가할 수 있는바 EU의 반덤핑조사 강화 및 제소 급증에 대비하여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EU 정부 간 관련 논의가 필요하고 협력채널 구축 및 확대가 요구됨.<sup>74)</sup>

## 4. 결어

■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를 취하면서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만료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은 ‘AFA’, ‘PMS’ 등을 활용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 한미 FTA에 따르면 덤핑조사 개시 전 사전협의(pre-initiation consultations)가 규정<sup>75)</sup>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sup>76)</sup> 사전적으로 덤핑조사와 관련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WTO에

73) (2) ... This Regulation is without prejudice to establishing whether or not any WTO Member is a market economy or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protocols and other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which countries have acceded to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one on 15 April 1994.

74) KIEP, EU, 중국의 시장경제 왜곡에 대한 보고서 발표(2018. 1. 23),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28171>(검색일: 2018. 2. 20).

75) 한미 FTA 제10.7조 제3항 통보 및 협의.

76) 그러나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반덤핑(Anti-Dumping)’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 해석과 적용에 관한 행정부의 견해에 관한 미국 정부의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제10장 무역구제에는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Implementation of these obligations does not require any changes to U.S. AD or CVD laws or regulations)”고 규정하고 있음. 한미

문제제기를 한 AFA와 관련한 미국의 덤핑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잘못된 조치임을 입증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OCTG 사건 최종판정에서 보여준 PMS와 관련한 미국의 법 집행에 대해서도 학계 및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제품에 수입규제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수입규제국의 무역구제조치관련 법제도 및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선제적 대응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의 공조 및 업계, 정부, 학계의 유기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sup>77)</sup>

■ EU도 중국 NME 지위 만료 가능성에 대한 사전예방책으로 '중대한 왜곡'이란 개념의 도입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시장경제국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미지수이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선제적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음.

■ 앞으로 AFA, PMS, 중대한 왜곡 등에 의한 영향뿐 아니라, 미국, EU 모두 행정당국의 직권조사로 인해 무역구제 조사 건수가 늘고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USTR 2018년 통상정책의제에서는 상무부 직권조사를 포함한 무역구제조치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한 바 있으며 EU의 개정 반덤핑규칙에서도 집행위가 중대한 왜곡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 시 이에 근거하여 조사 개시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앞으로 기업의 청원에 의한 조사 개시 외에도 직권조사를 통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확대가 예상됨<sup>78)</sup>.

표 24. 직권조사 관련 미국과 EU의 국내법 조항

| 미국 1930년 관세법                                                                                                                                                                                                                                                                                                                                                                                                                                                                       | EU 반덤핑규칙 2017/2321                                                                                                                                                                                                                                                                                                                                                                                                                           |
|------------------------------------------------------------------------------------------------------------------------------------------------------------------------------------------------------------------------------------------------------------------------------------------------------------------------------------------------------------------------------------------------------------------------------------------------------------------------------------|----------------------------------------------------------------------------------------------------------------------------------------------------------------------------------------------------------------------------------------------------------------------------------------------------------------------------------------------------------------------------------------------------------------------------------------------|
| 제702조/제732조 Procedures for Initiating an Antidumping Duty(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br>(a) INITIATION BY ADMINISTERING AUTHORITY. -<br>(1) In General - An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shall be initiated whenever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from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at a formal investigation is warranted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imposition of a duty under section 731/701(a) exist. | 제1조 (e) Where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5(9), of significant distortion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b) of this paragraph and decid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on that basis, the notice of initiation shall specify that fact. The Commission shall collect the data necessary to allow the construction of the normal value in accordance with point (a) of this paragraph. ...(중략) |

FTA 행정조치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박영덕(2017), p. 43 참고.

77) 미국, 인도,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외교부(2017) 참고.

78) 작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 약 26년 만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직권조사를 개시함.

EBN(2017. 11. 29), '美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개시', <http://www.ebn.co.kr/news/view/919605>

(검색일:2018.3.14.); 경향신문(2017. 11. 29), '미 상무부, 26년 만에 첫 반덤핑 직권조사... 중국산 제품 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91516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91516001)(검색일:2018.3.14.)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박영덕. 2017. 『국제통상법 기본 규정 초해』(제2판). HARRIE.
- 배연재. 2016. 11.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 외교부. 2017.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 유희진. 2017. 11. 「EU-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특정시장상황(PMS)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 장승화. 2017. 11.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의 WTO합치성- 미국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 정동원, 배연재. 2017. 「EU의 비시장경제국가 관련 반덤핑규칙 개정내용 및 평가」. 『무역구제』, Vol. 60.
- 정찬모. 2017. 11. 「미국의 반덤핑법상 '특별한 시장상황'의 적용과 WTO 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 주현수. 2017.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시장상황(PMS)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무역구제』, Vol. 60.
- 한국무역협회. 2016.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TRADE BRIEF, No. 36. (12. 8)

### [영문자료]

- Matthew R. Nicely & Brian Gatta. 2016. "U.S.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TPEA) of 2015 Could Lead to Increased Us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 Calculating Normal Value in Anti-Dumping Cases." Wolters Kluwer.
- Mikyung Yun. 2017. "The Us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Regulation of Antidumping."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21, No. 3.
- Weihuan Zhou & Andrew Percival. 2016. "Panel Report on EU-Biodiesel: A Glass Half Full? - Implications for the Rising Issue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The Chinese Journal of Global Governance*, 2.

### [외국법]

- US Tariff Act of 1930.
- US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 Regulation(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2016] OJ L176/21
- Regulation(EU) 2016/10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 Regulation(EU) 2017/23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EU) 2016/103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Regulation(EU) 2016/1037 on protection against subsidis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 [온라인 자료]

- 산업부 WTO 협정문. <http://motie.go.kr/motie/py/ce/wto/wto.jsp>(검색일: 2018. 2. 18).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회(2018. 2. 14).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

- s\_seq\_n=160168(검색일: 2018. 2. 28).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對韓수입규제 월간 동향. [http://www.ntb-portal.or.kr/import/condition\\_months\\_view.screen?menuid=ntb040301](http://www.ntb-portal.or.kr/import/condition_months_view.screen?menuid=ntb040301)(검색일: 2018. 3. 15).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2017. 12).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7&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767](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7&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767)(검색일: 2017. 3. 1).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산업계, '상당한 시장왜곡' 존재 인정한 중국 시장보고서 환영(2018. 1. 5).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0/index.jsp?sCmd=VIEW&nPostIndex=1775760>(검색일: 2018. 2. 20).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2018.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_navi.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4&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768](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_navi.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4&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768)(검색일: 2018. 2. 25).
-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PURPOSES OF TRADE DEFENCE INVESTIGATIONS(20. Dec. 2017)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7/december/tradoc\\_156474.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7/december/tradoc_156474.pdf)(검색일: 2017. 3. 1).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Possible change in the calculation methodology of dumping regar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and other non-market economies), SWD(2016) 370 final(9. Nov. 2016), p. 21.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november/tradoc\\_155080.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6/november/tradoc_155080.pdf)(검색일: 2017. 3. 4).
- European Commission - Fact Sheet, The EU's new trade defence rules and first country report(20. Dec. 20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377_en.htm)(검색일: 2017. 3. 7).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Granting of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5/571325/EPRS\\_IDA\(2015\)571325\\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5/571325/EPRS_IDA(2015)571325_EN.pdf)(검색일: 2017. 3. 4).
- GALLANT OCEAN THAILAND CO LTD v. UNITED STATES 사건(Fed. Cir. 2010). <http://caselaw.findlaw.com/us-federal-circuit/1522084.html>(검색일: 2018. 3. 3).
- PIIE. 2017.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s Stealth Trade Protection. <https://piie.com/system/files/documents/pb17-21.pdf>(검색일: 2018. 2. 22).
- KIEP. EU, 중국의 시장경제 왜곡에 대한 보고서 발표(2018. 1. 23).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28171>(검색일: 2018. 2. 20).
- KOTRA. EU, 반덤핑 관련 중국 시장왜곡 보고서 발표(2018. 1. 4).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4129>(검색일: 2018. 2. 20).
-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IN PLACE.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검색일: 2018. 3. 19).
- USTR. 2018 Trade Policy Agenda and 2017 Annual Repor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ports/2018/AR/2018%20Annual%20Report%20I.pdf>(검색일: 2018. 3. 12).
- WTO. DS51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5\\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5_e.htm)(검색일: 2018. 2. 28).
- \_\_\_\_\_. DS51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6_e.htm)(검색일: 2018. 2. 28).
- \_\_\_\_\_. DS539.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9\\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9_e.htm)(검색일: 2018. 3. 3).
- \_\_\_\_\_.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16 November 2017).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trdev\\_04dec17\\_e.pdf](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trdev_04dec17_e.pdf)(검색일: 2018. 2. 22).
- 2017년 11월 29일자 경향신문 "미 상무부, 26년 만에 첫 반덤핑 직권조사... 중국산 제품 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91516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91516001)(검색일: 2018. 3. 14).
- 2017년 11월 29일자 EBN "美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개시" <http://www.ebn.co.kr/news/view/919605>(검색일: 2018. 3. 14).
- 2018년 2월 22일자 더벨 "수출량 1위' 넥스틸, 비상경영체제 돌입."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210100037850002337&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210100037850002337&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검색일: 2018. 2. 27).
- 2018년 3월 13일자 EBN "포스코, 美 상계관세 소송 일부 승소...관세를 낮아지나" <http://ebn.co.kr/news/view/933251>(검색일: 2018. 3. 15).

**[부록] TPEA 제502조에 따른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의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p>(b) Adverse inferences</p> <p>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finds that an interested party has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in reaching the applicable determination under this title, may use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in selecting from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del>Such</del> adverse inference may include reliance on information derived from</p> <p>(1) the petition</p> <p>(2) a final determination in the investigation under this title</p> <p>(3) any previous review under section 751 or determination under section 753, or</p> <p>(4) any other information placed on the record.</p> | <p>(b) Adverse inferences -</p> <p>(1) <b>In general</b></p> <p>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finds that an interested party has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as the case may be), in reaching the applicable determination under this subtitle</p> <p>(A) may use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in selecting from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and</p> <p>(B) <b>is not required to determine, or make any adjustments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if the interested party had complied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b></p> <p>(2) <b>Potential sources of information for adverse inferences</b></p> <p>An adverse inference <b>under paragraph (1)(A)</b> may include reliance on information derived from-</p> <p>(A) the petition</p> <p>(B) a final determination in the investigation under this title</p> <p>(C) any previous review under section 751 or determination under section 753, or</p> <p>(D) any other information placed on the record.</p> |
| <p>(c) Corroboration of secondary information</p> <p>Whe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relies on secondary information rather than on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r review,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corroborate that information from independent sources that are reasonably at</p>                                                                                                                                                                                                                                                                                                                                                                                                                                                                                     | <p>(c) Corroboration of secondary information</p> <p>(1) <b>In general</b></p> <p><b>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b> whe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relies on secondary information rather than on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r review,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p>                                                                                                                                                                                                                                                                                                                                                                                                                                                                                                                                                                                                                                                                                                                                                                                                                                                                                                                                                    |

|                        |                                                                                                                                                                                                                                                                                                                                                                                                                                                                                                                                                                                                                                                                                                                                                                                                                                                                                                                                                                                                                                                                                                                                                                                                                                                                                                                                                                  |
|------------------------|------------------------------------------------------------------------------------------------------------------------------------------------------------------------------------------------------------------------------------------------------------------------------------------------------------------------------------------------------------------------------------------------------------------------------------------------------------------------------------------------------------------------------------------------------------------------------------------------------------------------------------------------------------------------------------------------------------------------------------------------------------------------------------------------------------------------------------------------------------------------------------------------------------------------------------------------------------------------------------------------------------------------------------------------------------------------------------------------------------------------------------------------------------------------------------------------------------------------------------------------------------------------------------------------------------------------------------------------------------------|
| <p>their disposal.</p> | <p>corroborate that information from independent sources that are reasonably at their disposal.</p> <p>(2) Exception</p> <p>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shall not be required to corroborate any dumping margin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p>                                                                                                                                                                                                                                                                                                                                                                                                                                                                                                                                                                                                                                                                                                                                                                                                                                                                                                                                                                                                                                             |
|                        | <p>(d) Subsidy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adverse inference determinations</p> <p>(1) In general</p> <p>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a party under subsection (b)(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p> <p>(A) in the case of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p> <p>(i)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applied for the same or similar program in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or</p> <p>(ii) if there is no same or similar program,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for a subsidy program from a proceeding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considers reasonable to use; and</p> <p>(B) in the case of an antidumping duty proceeding, use any dumping margin from any segment of the proceeding under the applicable antidumping order.</p> <p>(2) Discretion to apply highest rate</p> <p>In carrying out paragraph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apply any of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or dumping margins specified under that paragraph, including the highest such rate or margin, based on the evaluation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the situation that resulted i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ing an adverse inference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p> |

|  |                                                                                                                                                                                                                                                                                                                                                                                                                                                                                                                                                                                                                                                                                                                                     |
|--|-------------------------------------------------------------------------------------------------------------------------------------------------------------------------------------------------------------------------------------------------------------------------------------------------------------------------------------------------------------------------------------------------------------------------------------------------------------------------------------------------------------------------------------------------------------------------------------------------------------------------------------------------------------------------------------------------------------------------------------|
|  | <p>available.</p> <p>(3) No obligation to make certain estimates or address certain claims</p> <p>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adverse inference under subsection (b)(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s not required, for purposes of subsection (c ) or for any other purpose-</p> <p>(A) to estimate w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would have been if the interested party found to have failed to cooperate under subsection (b) (1) had cooperated; or</p> <p>(B) to demonstrate t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us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flects an alleged commercial reality of the interested party.</p> |
|--|-------------------------------------------------------------------------------------------------------------------------------------------------------------------------------------------------------------------------------------------------------------------------------------------------------------------------------------------------------------------------------------------------------------------------------------------------------------------------------------------------------------------------------------------------------------------------------------------------------------------------------------------------------------------------------------------------------------------------------------|

**[부록] EU 반덤핑규칙 2017/2321 제1조 (1), (2)에 따른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 <p>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p> <p>A. Normal Value</p> <p>6. The amounts for selling, for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and for profits shall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When such amounts cannot be determined on that basis, the amounts may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p> <p>(a) the weighted average of the actual amounts determined for other exporters or producers subject to investigation in respect of production and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in;</p> <p>(b) the actual amounts applicable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for the exporter or producer in question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in;</p> <p>(c) any other reasonable method, provided that the amount for profit so established shall not exceed the profit normally realised by other exporters or producers on sales of products of the same general category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in.</p> | <p>(동일)</p>                                                                                                                                                                                                                                                                                                                                                                                                                                                                                                                                                                                                                                                                                      |
| -                                                                                                                                                                                                                                                                                                                                                                                                                                                                                                                                                                                                                                                                                                                                                                                                                                                                                                                                                                                                                                                                                                                                                                                          | <p>'6a. (a) In case it is determined, when applying this or any other relevant provision of this Regulation,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use domestic prices and costs in the exporting country due to the existence in that country of significant distortion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b), the normal value shall be constructed exclusively on the basis of costs of production and sale reflecting undistorted prices or benchmarks, subject to the following rules.</p> <p>The sources the Commission may use include:</p> <p>— corresponding costs of production and sale in an appropriate representative country with a simila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s the exporting</p> |

country, provided the relevant data are readily available;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such country, preference shall be given, where appropriate, to countries with an adequate level of soci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if it considers appropriate, undistorted international prices, costs, or benchmarks; or
- domestic cost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positively established not to be distorted, on the basis of accurate and appropriate evidence, including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s on interested parties in point (c).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7, that assessment shall be done for each exporter and producer separately.

The constructed normal value shall include an undistorted and reason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b) Significant distortions are those distortions which occur when reported prices or costs, including the costs of raw materials and energy, are not the result of free market forces because they are affected by substantial government intervention. In assessing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stortions regard shall be had, inter alia, to the potential impact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 the market in question being served to a significant extent by enterprises which operate under the ownership, control or policy supervision or guidance of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 state presence in firms allowing the state to interfere with respect to prices or costs;
- public policies or measures discriminating in favour of domestic suppliers or otherwise influencing free market forces;
- the lack, discriminatory application or inadequate enforcement of bankruptcy, corporate or property laws;

— wage costs being distorted;  
— access to finance granted by institutions which implement public policy objectives or otherwise not acting independently of the state.

(c) Where the Commission has well-founded indications of the possible existence of significant distortions as referred to in point (b) in a certain country or a certain sector in that country, and where appropriate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 Commission shall produce, make public and regularly update a report describing the market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oint (b) in that country or sector. Such reports and the evidence on which they are based shall be placed on the file of any investigation relating to that country or sector. Interested parties shall have ample opportunity to rebut, supplement, comment or rely on the report and the evidence on which it is based in each investigation in which such report or evidence is used. In assessing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stortions, the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all the relevant evidence that is on the investigation file.

(d) When filing a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r a request for a review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Union industry may rely on the evidence in the report referred to in point (c) of this paragraph, where meeting the standard of evidence in view of Article 5(9), in order to justify the calculation of the normal value.

(e) Where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pursuant to Article 5(9), of significant distortion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b) of this paragraph and decides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on that basis, the notice of initiation shall specify that fact. The Commission shall collect the data necessary to allow the construction of the normal value in accordance with

|  |                                                                                                                                                                                                                                                                                                                                                                                                                                                                                                                                                                                                                                                                                                                                                                                                                                                                                                                                                                                                                                                                                                                                                                                                                                                                                                                                                                                                                                                        |
|--|--------------------------------------------------------------------------------------------------------------------------------------------------------------------------------------------------------------------------------------------------------------------------------------------------------------------------------------------------------------------------------------------------------------------------------------------------------------------------------------------------------------------------------------------------------------------------------------------------------------------------------------------------------------------------------------------------------------------------------------------------------------------------------------------------------------------------------------------------------------------------------------------------------------------------------------------------------------------------------------------------------------------------------------------------------------------------------------------------------------------------------------------------------------------------------------------------------------------------------------------------------------------------------------------------------------------------------------------------------------------------------------------------------------------------------------------------------|
|  | <p>point (a) of this paragraph.</p> <p>The parties to the investigation shall be informed promptly after initiation about the relevant sources that the Commission intends to us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normal value pursuant to point (a) of this paragraph and shall be given 10 days to comment. For that purpose,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ccess to the file, which shall include any evidence on which the investigating authority relie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9. Any evidence regarding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stortions may only be taken into account if it can be verified in a timely manner within the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p>                                                                                                                                                                                                                                                                                                                                                                                                                                                                                                                                                                                                                                                                                                                                           |
|  | <p>7. In the case of imports from countries which are, at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not members of the WTO and listed in Annex I to Regulation (EU) 2015/75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sup>(*1)</sup>, normal valu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price or constructed value in an appropriate representative country, or the price from such a third country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on, or where those are not possible, on any other reasonable basis, including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n the Union for the like product, duly adjusted if necessary to include a reasonable profit margin.</p> <p>The appropriate representative country shall be selected in a reasonable manner, due account being taken of any reliable information made available at the time of selection, and in particular of cooperation by at least one exporter and producer in that country.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such country, preference shall be given, where appropriate, to countries with an adequate level of soci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unt shall also be taken of time limits. Where appropriate, an appropriate representative country which is subject to the same investigation shall be used.</p> <p>The parties to the investigation shall be informed promptly after its initiation of the country envisaged and shall be given 10 days to comment</p> |